

KERI Brief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lcho@keri.org)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투자유인을 높여 민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지로 해석되는 반면 우리는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3.6% 증가하고, GDP는 연간 2.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임금은 연평균 0.7% 증가하고 고용은 연평균 818천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금상승과 고용증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반대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내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4조 원에 달한다. 국내소득감소와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유

출은 자본 장비율(자본/노동)의 하락을 의미하고 이는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감소는 임금하락과 고용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연평균 0.3%씩 감소하고 일자리는 연간 105천개씩 사라져 근로소득은 연간 1.1%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으로의 자본쏠림 현상으로 중국은 연간 5.8%, 아세안 3.0%, EU 2.1%, 일본 1.6%에 달하는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으로의 자본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이 가속화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상정책은 결국 가계소득을 올려 성장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율 인상이 소득 재분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큰 폭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외국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조건 완화, 최저한세제 폐지 등 법인세의 실무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 서론

□ 감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The Tax Cuts and Jobs Act: TCJA」라는 세제개혁안이 미국의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

○ TCJA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추고 과세구간을 1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글로벌 과세체계(worldwide system of taxation)를 영토주의(territorial system of taxation)로 전환하고 최저한세율을 폐지하는 등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¹⁾

- 이밖에도 도관소득(pass-through business income) 세율을 최고 25%로 제한하고, 이월결손금의 소급적용 규정 폐지, 결손이월공제 제도 개편, 근로자의 음식 및 오락 비용 공제 축소, 교통관련 복리후생비 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리하였음

○ TCJA는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낮춰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세제의 단순화'라는 조세원칙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미국과 정반대의 세제개혁을 추구하고 있음

○ 3,000억 원 이상 과세소득에 25%의 법인세율 과세구간을 신설하여 과세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였음

- 2017년 세제개편에는 중소기업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을 신설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공제율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과 달리 우리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세제의 단순화'라는 조세원칙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세제의 비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음

○ 본 연구는 한·미간의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양국의 경제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1) 소득세의 세율인하와 기본공제 법안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율 인하안은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

II. 기존문헌으로 본 법인세의 경제적 영향과 논쟁

1.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파급경로

□ 법인세율 인하 →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 하락 → 투자 증가 → 자본스톡 증가 → 잠재성장률 증가

-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국내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순유출이 감소하여 자본스톡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파급효과가 유발됨
- 기존문헌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비용에 대한 투자탄력성은 대략 -1.0 내외로 추정되고 있어 법인세율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함
 - Cummins and Hassett(1992)는 -1.1(장비) ~ -1.2(건축물), Auerbach and Hassett(1992) -0.67 ~ -0.84, Harhoff and Ramb(2001) -0.42, Dwenger(2014) -0.25 ~ -0.95, Hassett and Hubbard(2002) -1.0 등 신고전학파가 예상하는 사용자 비용에 대한 투자탄력성 -1.0에 근접한다는데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²⁾
- 기존의 351개 기존연구에 대한 De Mooij and Ederveen(2003)의 문헌조사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에 대한 외국인투자(FDI)의 준탄력성(semi-elasticity)은 -3.3에 달함
 - 법인세율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준탄력성은 351개 연구의 평균 법인세율에서 1%p 변화할 때 외국인투자의 변화율을 의미함
 - 준탄력성 3.3이 의미하는 바는 법인세율 1%p 인상 되면 외국인투자는 3.3% 감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De Mooij and Ederveen(2005)의 연구에서는 427개에 달하는 기존연구를 추정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법인세율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준탄력성의 평균값을 추정하고 있는데,
- 시계열분석의 평균은 -2.61, 횡단면분석의 평균은 -7.61, 패널분석의 평균은 -2.73, 이산선택분석(discrete choice model)의 평균은 -3.43에 달하고, 전체 평균은 -3.72에 달함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는 노사협약(직접효과), 생산성향상효과(간접효과), 법인세 부담의 노동으로의 전가(귀착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 (직접효과) 법인세 인하 → 자본소득 증가 → 노사협상 → 임금증가³⁾
- (간접효과) 법인세 인하 → 투자증가 → 자본 장비율(자본/노동) 증가 →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임금증가
 - 법인세율에 대한 임금탄력성은 Felix(2009) -0.14 ~ -0.36, Fuest et al.(2017) -0.14, Ebrahimi and Vaillancourt(2016) -0.15 ~ -0.24, Hassett and Mathur(2015) -0.5, Azemar and Hubard(2015) -0.17(미국) ~ -0.43(OECD)로 추정하고 있음⁴⁾
- Azemar and Hubard(2015)에 따르면 법인세에 따른 임금변화는 3/4는 간접효과로 인해 발생하고 1/4은 직접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법인세 귀착효과) 법인세 귀착효과는 법인세 세부담이 근로자로 전가되는 효과

2) CEA(2017), "The Growth Effects of Corporate Tax Reform and Implications for Wages" 참조

3) Arulampalan et al.(2012) 참조

4) Felix(2009)는 미국 정부(1977~2005), Fuest et al.(2017)은 독일 지방자치단체(1993~2012), Ebrahimi and Vaillancourt(2016)는 캐나다 자치구(1998~2013), Hassett and Mathur(2015)는 65개국, Azemar and Hubard(2015)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

- 법인세의 귀착(incidence)을 다루는 기존연구들은 법인세 부담의 약 21% ~ 75%가 근로자에게로 전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근로자로의 전가 비중은 Arulpalapam et al(2012) 50%, Desai et al(2007) 45% ~ 75%, Gravelle and Smetters (2006)⁵⁾ 21% ~ 73%, Randolph(2006) 59% ~ 70%
- Jensen and Mathur(2011)은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디지털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의 이동성에 제약이 없어지고 있어 근로자로의 전가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법인세의 근로자 부담비중은 50%를 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법인세율 인하 →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 확대 → 다국적기업 소득(profit)의 해외 이전 축소 & 국내로의 송금 증가 → 국내소득증가

- 법인세율 국제간 격차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에 대한 준탄력성(semi-elasticity)을 추정한 기존 연구의 평균은 0.8~1.0에 달하고 있음⁶⁾
 - Heckemeyer and Overesch(2013)는 기존연구의 추정값을 가지고 메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법인세율 격차에 대한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0.8에 달하고 있음
 - 준탄력성 0.8이 의미하는 바는 자회사 소재 국가의 법인세율이 10%p 인하되어 법인세율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8% 증가한다는 것임
 - 조경업(2016)은 한국 자회사의 법인세율에 대한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2.25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 소재 외국계 자회사의 소득이전 준탄력성은 1.364로 추정하고 있음
- *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p 증가하여 외국과의 격차가 1%p 더 벌어진다면 외국으로 유출되는 소득은 2.25% 증가하며,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은 1.364% 감소한다는 의미임

2. 법인세율 인하와 인상에 대한 논쟁

□ 법인세 인하로 야기되는 투자 증가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논쟁

- 법인세 인하 → 재정적자 증가 → 국가채무 증가 → 이자율 증가 → 투자와 자본유입의 상쇄효과(crowding effect) 발생
 - 그러나 상쇄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법인세 인하 효과를 완전히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 기존 실증분석의 결과임
- Krugman(2017)은 법인세 인하 → 자본유입 증가 → 환율상승 → 수출둔화 & 수입증가 → 무역수지 악화 → 고용감소라는 파급효과를 유발한다고 주장⁷⁾
 - Krugman(2017)은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이번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로 근로소득은 약 2.5백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Appelbaum(2017)은 법인세 인하가 수출재화의 가격을 낮춰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무역수지가 발생하더라도 나쁜 것만은 아니고 미국 국민의 후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쟁

- 법인세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 2가지 상쇄효과에 의해 결정됨
 - ① 고숙련 노동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자본비율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으로 자본이 감소한다면 고숙련 노동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② 이동성이 높을수록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데, 고숙련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의 부담이 저·중숙련 노동자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짐

- 5)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질수록 전가 비중이 높아지는데 국제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으로의 전가 비중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6) 법인세율 격차의 변화율에 대한 소득이전 변화율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 격차의 절대값에 대한 소득이전 변화율을 추정하기 때문에 탄력성 대신 준탄력성으로 부르고 있음
- 7) Krugman(2017)은 이번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2.5백만 달러에 달하는 근로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Felix(2007)와 Fuest et al(2017)는 ①의 효과보다 ②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중·저숙련 노동자의 혜택을 확대하여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반해 Krugman(2017)와 Summer(2017)은 주식 보유 형태, 주주의 의사결정행태, 재정적자와 무역 수지적자의 영향으로 근로자에게 귀착되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미국 주식의 35%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상당부분이 외국투자자로 귀착
 - 법인세가 경영자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아니며, 법인세 인하로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다면 제조업의 고용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미국 법인세율 인하의 실증분석 사례

- Council of Economic Adviser(CEA, 2017)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GDP는 3~5% 증가하고, 가계소득은 연평균 4,0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CEA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자본사용자 비용을 추정하고, 여기에 기존연구가 추정한 탄력성을 적용하여 자본 및 근로소득의 변화와 성장률을 추정하고 있음
 - 법인세율 35%에서 20%로 인하 → 자본의 사용자 비용 15% 하락 → 민간투자 15% 증가(연간 347십억 달러) → FDI 201십억 달러 증가 & 해외투자 131십억 달러 감소하여 순투자 332십억 달러 증가
 - Felix(2009)의 법인세율에 대한 임금탄력성 -0.16을 적용하여 가계소득을 연평균 4,0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Tax Foundation(2017)은 GDP는 3.1%(연평균 587십억 달러), 자본소득은 8.5%, 임금은 2.6%(587천명 고용효과)에 달하고, 경제 활성화로 증가

하는 세수입은 향후 10년간 779십억 달러에 달해 순 법인세수 감소는 757십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⁸⁾

- Tax Foundation(2017)은 세율인하에 따른 법인세 수 감소액은 10년간 1,536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장효과를 고려할 경우 세수감소는 757십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
- Joint Committee on Taxation(JCT, 2017)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국제조세 등 상원을 통과한 세제개혁 전체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GDP는 연평균 0.7% 증가하고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총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JCT는 MEG(Macroeconomic Equilibrium Model), OLG(Overlapping Generation Model),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의 결과에 각각 0.4, 0.4, 0.2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TCJA 법안이 시행되면 자본소득은 0.9%, 고용은 0.5%, 소비는 0.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수정법안에 따른 세수감소는 총 1,436.8십억 달러에 달하는데, 경제성장의 환류효과로 428.4십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입이 발생하여, 재정적자는 1,008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8) Tax foundation(2017), "The Jobs and Wage Effects of a Corporate Rate Cut"과 "Details and Analysis of the 2017 Tax Cuts and Jobs Act"로부터 발췌

〈표 1〉 미국의 세제개혁 효과

		CEA (법인세를 인하 효과)	Tax Foundation (법인세를 인하 효과)	JCT (JCJA 효과)
세수효과 (십억 달러)	기준	-	-1,536.0	-1,436.8
	환류효과	-	757.0	428.4
	순효과	-	-779.0	-1,008.4
GDP(%)		3 ~ 5	3.1	0.7
자본스톡(%)		-	8.5	0.9
민간투자		15	-	-
해외투자 (십억 달러)	FDI	201	-	-
	해외투자	-131	-	-
	순투자	332	-	-
임금(%)		0.16	2.6	0.5
고용(천명)		-	587	-
가계소득(달러)		4,000	1,802~2,664	-

자료: CEA(2017), "The Growth Effects of Corporate Tax Reform and Implications for Wage", Tax foundation(2017), "The Jobs and Wage Effects of a Corporate Rate Cut"과 "Details and Analysis of the 2017 Tax Cuts and Jobs Act", JCT(2017), "Macroeconomic Analysis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as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November 16, 2017"

III. 한·미 법인세율 개편에 따른 효과분석

1.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 분석모형

-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KERI-CGE 모형을 이용함
 - KERI-CGE 모형은 다지역-다산업을 대상으로 한 완전 동태적 글로벌 CGE 모형으로 분류됨
 - 분석대상지역: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등 총 11개 지역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산업: 농림수산업, 에너지산업, 음식료,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 건설, 물류산업, 서비스업 등 총 14개 산업으로 구성됨
 - 분석대상 기간: 2011년~2040년

□ 세수전망

-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에 따른 세수효과는 JCT의 추정치를 이용

- <표 2>에서 보듯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입은 2018년에 101.3십억 달러 감소하고 2027년에 156.3십억 달러 감소하여 10년간 총 1,348.5십억 달러 감소할 전망

- 한국의 세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2017)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표 3>과 같이 연도별로 배분
 - 국회예산정책처(2017)의 추정에 따르면 서울인상 대상 법인은 77개에 달하고 기업당 법인세는 252억 원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2018년도에 1,859억 원 증가하고, 2018년~2022년까지 연평균 21,111억 원 증가하여 총 84,44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2018년도의 법인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2018년도의 법인세수의 90%는 전년도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확정된 신고분이고, 2018년도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부분은 중간예납분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약 10%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 모형이 연도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력데이터도 연도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를 <표 3>와 같이 연도별로 배분하였으며, 2022년 이후는 연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표 2> JCT가 추정한 법인세율 35%에서 21%로 인하시 세수입변화

(단위: 십억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세수입	-101.3	-125.3	-130.5	-131.1	-132.6	-136.2	-140.7	-144.7	-149.7	-156.3	1,348.5

자료: "Estimated Budget Effects of the Conference Agreement for H.R.1, the "Tax Cuts and Jobs Act", JCT December 18, 2017, JCX-76-17에서 발췌.

<표 3> 한국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변화

(단위: 억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세수입	1,859	19,770	20,343	20,933	21,540	84,446

주: 국회예산정책처(2017)의 추정치 연평균 21,111억 원과 (2018년~2022년) 누적 합계 84,446억 원을 연도별로 배분

2. 분석결과

□ 경제적 파급경로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는 투자, 임금, 자본유출입,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 우리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35%에서 21%로 내린다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4%p 높아져 변동폭이 17%p에 달하게 됨
 -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내리는 미국의 경우,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하락하면서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순유입 증가,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파급경로를 거치면서 GDP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이에 반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유출로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전망이다
 - 또한 법인세 인상은 임금과 고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부담이 노동자로 전가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감소와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이 증가하고 송금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본소득과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표 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투자 감소는 4.1%에 달하고, 고용은 84천명, GDP는 1.3% 감소할 전망

- 고용감소와 더불어 임금이 연평균 0.2% 감소하여 근로소득은 연평균 1.1% 감소하고, 자본소득은 1.4% 감소할 전망에 있어 법인세의 상당부분이 근로자로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만약 미국만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의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0.8% 감소하고, 고용은 22천명, GDP는 0.4%씩 감소할 전망

<표 4> 한·미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향후 10년간 연평균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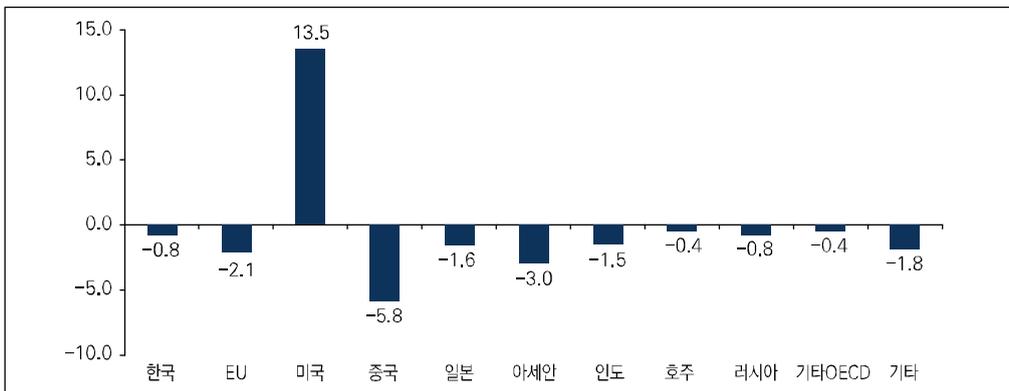
	한국 법인세율 인상 (22% → 25%)		미국 법인세율 인하 (35% → 21%)		한국 법인세율 인상 & 미국 법인세율 인하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GDP(%)	-1.3	0.01	-0.4	2.7	-1.7	2.7
투자(%)	-4.1	0.04	-0.8	13.5	-4.9	13.6
임금(%)	-0.2	0.00	-0.1	0.7	-0.3	0.7
고용(천 명)	-83.8	4.49	-21.7	813.4	-105.1	818.0
근로소득	-1.1	0.0	-0.3	1.9	-1.5	1.9
자본소득	-1.4	0.0	-0.5	4.7	-1.9	4.7
수출	-0.1	0.0	-0.4	0.1	-0.5	0.1
수입	-0.8	0.0	-0.3	2.8	-1.1	2.8
무역적자	-9.6	0.1	0.6	9.2	-8.9	9.3

-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미국으로의 자본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그림 1>에서 보듯이 모든 국가의 투자가 감소하게 될 전망
 -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중국의 투자가 5.8%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은 아세안 3.0%, EU 2.1%, 일본 1.6%의 순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
 -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자본의 쏠림 현상이 국제간 법인세 인하경쟁의 원인이 되는 만큼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다른 국가의 법인세 인하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CEA(2017)와 Tax Foundation(2017) 추정과 같이 미국의 투자는 연평균 13.5% 증가하고, GDP는 2.7% 증가하고 일자리는 연간 813천개 창출될 전망
 - 미국의 근로소득은 연간 1.9%씩 증가하고 자본소득은 4.7% 증가하여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상당부분 근로자에게도 돌아갈 전망

-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연간 0.3%와 0.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인상하고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하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4조 원에 달함**
 - 우리나라의 자본 사용자비용이 증가하여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일자리는 연간 105천개씩 사라질 전망
 -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소득이 감소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연간 1.1%씩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경제위기 때마다 경험했듯이 성장이 둔화되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율 인상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그림 1> 미국의 세제개편에 따른 각국의 투자변화

(단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은 연간 0.5% 감소하고, 수입은 1.1%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8.9% 감소하는데, 이와 같은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결국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한·미간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미국의 GDP는 연평균 2.7% 증가하고, 투자는 13.6%, 고용 818천명 증가하고, 무역적자는 9.3% 확대될 전망 ○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으로 향후 10년간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서 GDP와 가계소득이 증가할 전망 ○ 법인세율이 하락하면 노동자 일인당 자본 비율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임금은 연평균 0.7% 증가할 전망 - 임금상승과 고용증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이 되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ugman(2017)이 지적하였듯이 자본유입이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을 줄일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 - 미국의 수출은 연평균 0.1% 증가하고, 수입은 2.8%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9.3% 증가하지만 고용은 818천명 증가하고 GDP는 2.7% 증가할 전망이다 ▣ <표 5>는 양국의 법인세 개편으로 인한 한국의 GDP와 고용 변화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음 ○ 한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한국의 GDP는 연평균 22.8조 원씩 감소하여 10년간 총 228조 원의 GDP 손실이 예상되며, 고용은 연평균 83.8천 명씩 감소하여 10년간 총 837.5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
---	---

<표 5> 한·미 법인세율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10억 원, 천 명)

	한국 법인세율 인상 (22% → 25%)		미국 법인세율 인하 (35% → 21%)		한국 법인세율 인상 & 미국 법인세율 인하	
	GDP	고용	GDP	고용	GDP	고용
2018	-12,628.9	-58.9	-7,023.9	-12.3	-19,579.0	-70.8
2019	-22,426.0	-74.3	-8,224.7	-16.3	-30,549.8	-90.4
2020	-22,965.9	-77.1	-7,942.0	-18.3	-30,809.4	-95.2
2021	-23,328.7	-80.0	-7,297.7	-19.7	-30,532.4	-99.4
2022	-23,686.9	-83.0	-6,779.1	-21.0	-30,375.5	-103.8
2023	-24,037.0	-86.1	-6,450.0	-22.6	-30,398.8	-108.4
2024	-24,343.2	-89.4	-6,200.7	-24.2	-30,457.3	-113.3
2025	-24,604.0	-92.7	-5,928.6	-25.8	-30,447.9	-118.2
2026	-24,853.7	-96.2	-5,740.6	-27.4	-30,510.8	-123.3
2027	-25,150.4	-99.9	-5,673.9	-29.2	-30,741.1	-128.7
연평균	-22,802.5	-83.8	-6,726.1	-21.7	-29,440.2	-105.1
누적합계	-228,024.6	-837.5	-67,261.2	-216.8	-294,401.9	-1,0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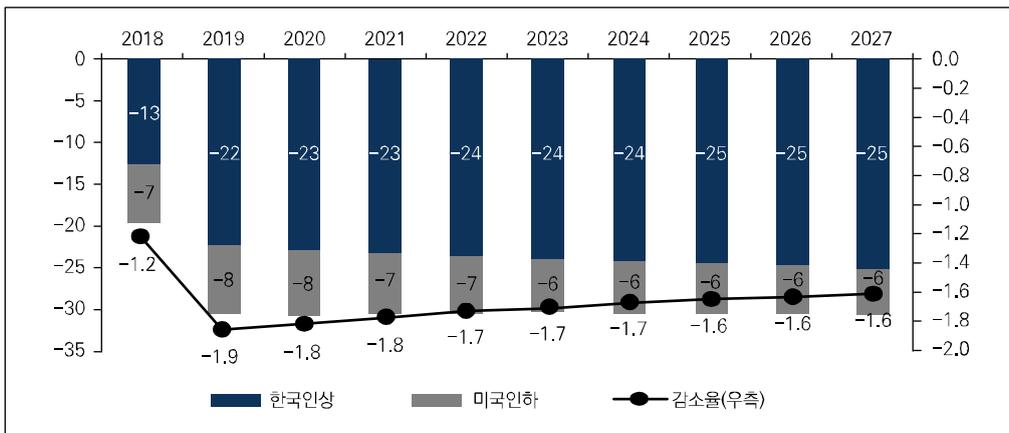
주: GDP는 국회예산정책처(2016),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의 GDP 전망 대비 변화로 추정

○ 미국만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한국의 GDP는 연평균 6.7조 원씩 감소하여 10년간 총 67.3조 원이 감소하며, 고용은 연평균 83.8천 명씩 감소하여 10년간 총 837.5명에 달하는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 한국이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미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한국의 GDP는 연평균 29.4조 원씩 감소하여 10년간 총 294.4조 원의 GDP 손실이 예상되며, 고용은 연평균 105.1천 명씩 감소하여 총 1,051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림 2〉 한·미 법인세율 변화가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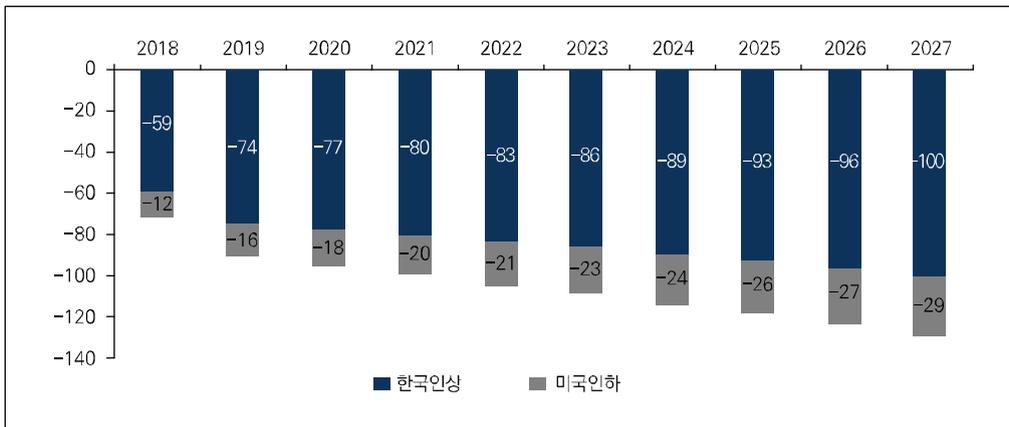
(단위: 조 원, 천 명)



주: 국회예산정책처(2016),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대비 변화율로 추정

〈그림 3〉 한·미 법인세율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 원, 천 명)



IV. 결론

□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14%p 낮추는 정책을 선택한 반면 우리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선택하였음

○ 법인세율 인하가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확대하여 GDP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실증분석은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법인세 인하로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연간 818천 명에 달할 전망이며, GDP는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임

○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일자리는 연간 105천 명 감소하고, GDP는 연평균 1.7%(29.4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법인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증대를 위해 지출할 예정에 있어 재정적자는 증가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민간의 일자리 감소효과에 의해 상쇄될 전망

- 법인세 인상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등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가계소득을 올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높음

- 법인세 부담의 상당부분 근로자로 전가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해고 형태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법인세율 인상은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로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으로 주요국의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중국의 투자가 5.8%, 아세안 3%, EU 2.1%, 일본 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 최근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배당에 대해 부과되던 원천징수 10%를 중국에 재투자할 경우 이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국제간 자본유치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상은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쟁국의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나마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인세율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노력이 요구됨

○ 법인세율 인하 이외도 미국의 세계개편은 우리가 주목해야할 개혁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글로벌 과세체계(worldwide system of taxation)를 원천지 과세체계(territorial system of taxation)로 전환하여 해외 소득을 국내로의 송금을 촉진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⁹⁾

- 미국의 세계개편은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축소와 최저한세를 폐지, 영토주의과세체계로 전환하면서 세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세제의 단순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임

○ 법인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인세율을 당장 인하하기 어렵다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계개편을 추진해야 함

-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외국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조건 완화, 최저한세제 폐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9) 글로벌 과세체계는 해외 자회사가 모국으로 송금하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추가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면 이에 과세하는 제도이며, 원천지 과세체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원천지국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료되는 제도를 의미함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8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쟁점」.

국회예산정책처, 2016,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 전망」.

조경엽, 2016,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6-13.

Arulampalam, W., Devereux, M. P., and Maffini, Giorgia. 2012. "The Direct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on Wages", *European Economic Review*, 56(6): 1038-1054.

Auerbach, A. and Hassett, K. A. 1992, "Tax Policy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7: 141-170.

Azémard, C. and Hubbard, G.R. 2015, "Country Characteristics and the Incidence of Capital Income Taxation on Wages: An Empirical Assess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8(5): 1762-1802.

CEA, 2017, "The Growth Effects of Corporate Tax Reform and Implications for Wage",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October, 2017.

Cummins, J. G. and Hassett, K. A. 1992, "The Effects of Taxation on Investment: New Evidence from Firm-Level Panel Data", *National Tax Journal* 45: 243-252.

Desai, M., Foley, C. F., and Hines, J. R. 2007, December, "Labor and capital shares of the corporate tax burden: International evidence", In *Conference on Who Pays the Corporate Tax in an Open Economy*.

De Mooij, R. A. and Ederveen, S. 2003, "Tax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ynthesis of Empirical Research",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0: 673-693.

De Mooij, R. A. and Ederveen, S. 2005, "Explaining the Variation in Empirical Estimates of Tax Elasticit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2005-108/3*.

Dwenger, N. 2014, "User Cost of Capital Revisited", *Economica* 81: 161-186.

Ebrahimi, P., and Vaillancourt, F. 2016,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and Payroll Taxes on the Wages of Canadian Workers", *Fraser Institute*.

Felix, R. A. 2009, "Do State corporate income taxes reduce wages?", *Economic Review-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94(2), 77.

Fuest, C., Peichl, A., and Sieglloch, S. 2017, "Do Higher Corporate Taxes Reduce Wages? Micro Evidence from Germany", *American Economic Review*, forthcoming.

Gravelle, J. and Smetters, K.A. 2006, "Does the Open Economy Assumption Really Mean That Labor Bears the Burden of a Capital Income Tax?", *Advances in Economic Analysis & Policy* 6(1).

Harhoff, D. and Ramb, F. 2001, "Investment and taxation in germany-evidence from firm-level panel data", *Investing today for the world of tomorrow-Studies on the investment process in Europe*, Springer, Heidelberg, 47-84.

Hassett, K. A., and Hubbard, R. G. 2002, "Tax policy and business investment",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3, 1293-1343.

Hassett, K. A. and Mathur, A. 2015, "A Spatial Model of Corporate Tax Incidence", *Applied Economics*, 47(13): 1350-1365.

JCT, 2017, "Macroeconomic Analysis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as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November 16, 2017", *Joint Committee of Taxation*.

JCT, 2017, "Estimated Budget Effects of the Conference Agreement for H.R.1, the "Tax Cuts and Jobs Act", *JCT December 18, 2017, JCX-76-17. Joint Committee of Taxation*.

Jost H. Heckemeyer and Michael Overesch, 2013, "Multinationals' Profit Response to Tax Differentials: Effect Size and Shifting Channels, Discussion Paper No. 13-045, Center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Randolph, William C. 2006, "International Burde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Congressional Budget Office Working Paper No. 2006-09.

Summer, 2017, "Hassett's flawed analysis of the Trump tax plan", CNBC, 2017.10.17.

Tax Foundation. 2017, "The Jobs and Wage Effects of a Corporate Rate Cut"

Tax foundation, 2017, "Details and Analysis of the 2017 Tax Cuts and Jobs Act"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7년 12월 27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